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원)	주소
29	1900447761765	2016-4-70-2-0000876	주식회사 에스지마린	21,00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30	1900447762994	2016-4-70-2-0000940	주식회사 정연이엔지	12,600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31	1900447763129	2016-4-70-2-0000966	보성건설(유)	12,600	전라북도 무주군 주계로1길
32	1900447763004	2016-4-70-2-0000986	(주)한영건설	18,9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길
33	1900447763026	2016-4-70-2-0001083	남봉진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34	1900447762220	2016-4-70-2-0001243	임수인	9,450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5	1900447763002	2016-4-70-2-0001252	오명석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36	1900447761777	2016-4-70-2-0001327	정종민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37	1900447763007	2016-4-70-2-0001419	한명주	3,150	전라북도 김제시 요춘북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1-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출입통제장소 지정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바다 수영 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 해상
- 지정일: 2021. 4. 1.
- 기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 대상: 모든 수영 활동자
- 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위

① 북위 37°17' 00", 동경 126°33' 30", ② 북위 37°16' 30", 동경 126°33' 00"

③ 북위 37°17' 15", 동경 126°31' 30", ④ 북위 37°17' 45", 동경 126°32' 00"

위 각 호(① ~ ④)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법**원****부산고등법원****제1형사부****판 결**

사 건 2018재노1 가. 강도살인

나. 강도상해

다. 강도강간

라. 특수강도

마. 특수감금¹⁾

바. 공무원자격사칭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최인철 (620925-*****), 회사원

주거 창원시 진해구 안창북로 42, 101동 1203호(용원동, 현대아파트)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1494-1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장동익 (591215-*****), 강연 등

주거 부산 영도구 상리로 1, 209동 106호(동삼동, 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남항동1가 212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송성욱(기소), 변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김예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동화 법무법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윤경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1. 7. 선고 92노1125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92. 8. 11. 선고 91고합1305, 92고합1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최인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최인철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 강도상해의 점, 강도강간의 점, 특수강도의 점, 각 감금의 점, 1991. 11. 초순경의 공무원자격사칭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991. 11. 6.경의 공무원자격사칭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장동익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특수감금죄에 대한 형벌조항인 ‘형법 제278조’가 아닌 감금죄에 대한 형벌조항인 ‘형법 제276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도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형법 제27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